

개혁이란 무엇인가?

박호성

개혁의 돌풍이 몰아치고 있다. '개혁'이 이 시대의 가장 인기 있는 유행어로 떠오른 듯하다. 졸던 개도 갑자기 잠이 깨면 "개-혁"하고 짖는다는 우스갯소리가 나돌 정도다. 더군다나 이번 총선에서 개혁을 울부짖던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으로 부상하고, 게다가 민주노동당까지 합세하여 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지 아니한가. 그런 와중에 얼마 전에는 '중단 없는 개혁'을 외치는 "개혁의 화신", 천정배 의원이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로 선출되어 개혁의 주가를 한층 올려놓기도 하였다. 거기에다가 또 보수 야당에서 줄곧 개혁을 기려왔다고 일컬어지는 김덕룡 의원이 한나라당 원내대표로 뽑혀 합세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개혁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보는 것도 적잖은 역사적 의미가 있을 듯하다.

개혁의 세계화와 세계적 보수화

개혁의 돌풍이 몰아치고 있다. 저 동유럽과 소련에서 불기 시작한 '개혁'의 열풍은 베를린 장벽을 넘어 유럽 공동체EC를 결속시키고, 이윽고는 알래스카와 태평양을 건너 미국과 일본, 한국까지 개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사회주의권의 개혁은 사회주의 자체의 몰락을 자초하고 말았지만,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개혁은 자본주의의 완전무장을 겨냥하고 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평화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은 적어도 마르크스와 엥겔스에게는 통하지 않는 논리이다. 이러한 그들의 이론적 신념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역설적으로 사회주의는 사실상 패퇴하였다. 언제까지 지속될지 쉽사리 속단할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자본주의가 다시금 패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서로 결정적 영향을 주고받으며 대치해 왔다는 것도 역시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러시아 혁명 이후에 등장한 수정자본주의 또는 복지국가형 자본주의나 사회주의의 스탈린주의적 발전 그리고 근래의 사회주의의 몰락과 자본주의 국가들의 개혁 움직임들도 다 그러한 사실의 직접적 반영들이다.

훗날 어느 역사가가가 있어, 예컨대 오늘날의 세계사적 특성을 추려 내고자 할 때, 그는 아마도 '개혁의 시대'라는 용어를 동원하려 할지 모른다. 그만큼 개혁이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다. 현재 자본주의권에 팽배해 있는 개혁의 물결은 일단, 공산권이라는 '외부의 적'이 소멸되어 가고 있는 형세에 발맞추어 그동안 등한히 해 온 '내부의 적'에 다시금 눈길을 돌리려는 자기검증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다가올 자본주의 진영 내부의 갈등과 충돌에 대비하기 위한 대내적 전열정비 노력이 이러한 개혁의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말해 개혁의 세계화가 오늘날의 특징이다.

그러나 동시에 세계적인 보수화 경향이 강화되고 있기도 하다. 상징적으

로는 이른바 '네오콘'의 막강한 후원에 힘입은 부시의 재선이 그러한 경향을 웅변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그런데 '보수화' 경향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그리고 그것은 '보수주의'와 어떠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가? 우리는 물론 '보수화 경향'과 '보수주의의 확산'을 서로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진보세력 또는 진보이념 내부에서의 보수화 경향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것을 일단 보수주의의 새로운 대두 및 팽창으로 갈무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보수주의란 무엇인가?

보수주의는 한마디로 현존 질서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사회적 이득을 지속적으로 향유할 수 있다고 믿는 계급이나 집단의 자기방어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정치적 보수주의는 프랑스 대혁명의 진보이념에 대한 반동으로 출현한다. 시민혁명의 담당세력이었던 부르주아 계급은 계몽 철학과 자유주의적 진보이념으로 철저히 무장하였다. 그들은 역사의 무한한 진보를 신뢰하였다. 나아가 인간이성의 탁월한 능력으로, 인간의 역사적 이상은 결국 실현될 수밖에 없으리라는 낙관적 희망에 불타 있었다. 반면에 보수주의는 전통과 전래된 제도 속에 신의 섭리와 조상의 잠재적인 지혜가 구현되어 있다고 믿는다. 보수주의의 원조 에드먼드 버크E. Burke의 말처럼, 사회는 "생존해 있는 자와 사멸한 자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의적인 개혁이 용인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결합 있는 인간이성에 의해 만들어진 사변적 이론이나 추상적 체계보다는, 역사를 통해 몸소 겪고 쌓아 올린 경험을 더욱 중요시한다. 뿐만 아니라 보수주의는 어떠한 사회를 막론하고 권위 없이 존속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 따라서 위계 질서에 의해 잘 조직되고 정돈된 사회를 지향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불평등을 옹호하고 권리와 의무에서의 차별을 당연시한다. 말하자면 평등주의 원칙은 모든 보수주의적 사상가에게는 기피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유럽적 보수주의는 오랜 기간에 걸쳐 혁명의 세례를 받아왔기 때문에 일정한 변화와 개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바로 이러한 보수화 경향에 결정적인 역사철학적 정당성을 부여한 것은 다름 아닌 사회주의권의 몰락이었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언』은 그 실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세계사적 사건으로부터 어떠한 현실적 영향을 받았을까? 어차피 우리나라의 보수주의는 수호해야 할 이념을 지니지 못하였다. 새로운 문물이나 혁신적인 가치관들은 무엇보다 일본 제국주의와 한국 전쟁이라는 비정상적인 채널을 통해 강압적으로 주입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주체적인 역량으로 그것들을 비판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도 갖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보수주의는 본래부터 외세의 영합과 반대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통해 자신의 명맥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들 보수세력의 무無 이념은 정치집단의 이합집산을 이념과 노선의 차이가 아니라 인맥의 얽히고 설킴에 내맡기도록 만들었다. 친일잔재들이나 유신잔류부대 등이 끊임없이 권력의 상층부를 맴돌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사정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요령주의와 기회주의가 널리 퍼지고 국민들의 도덕적 황폐화가 초래된 것도 마찬가지다. 최근 한나라당의 색깔론 제기나 '정체성' 논란을 통한 사상적 폭행도 바로 이런 굴레에 속한다. 요컨대 우리나라에는 좌익수만 있다. 우익수는 단지 야구장에만 있을 뿐이다. 우리는 아직도 이러한 구시대적 작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자본주의의 궁극적 승리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그동안 자본주의권의 결속을 가능케 했던 공통된 '외부의 적'이 소멸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본주의 국가들은 한편으로는 대외적 반공주의로 인해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내부의 적'을 개혁하는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한편으로 공산권이라는 공동의 적이 소실됨으로 인해서 서로 간의 경쟁을 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개혁'과 '세계화'의 구호는 이러한 사태발전의 조그만 본보기에 지나지 않는다. 어쨌든 사회주의권의 파탄은 대내적으로는 보수적 반공주의의

칼날을 무디게 함으로써, 그간 공산주의와의 대결을 빌미로 막아 놓았던 사회 내부의 민주화 물꼬를 트는 데 진보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예컨대 노무현 대통령의 등장이나 민주노동당의 의회 약진 역시 그것의 괄목할 만한 결실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개혁의 이중성

나는 현재 제기되는 우리 사회의 개혁의 본질을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특히 개혁의 지향 목표 그리고 주도 세력의 두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첫째, 개혁 세력이 현재 무엇을 지향하고자 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우리는 '진보적 개혁'과 '보수적 개혁'을 서로 구분할 수 있다. 이미 튼튼히 뿌리내린 가치체계를 기존 사회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극복하고자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진보적 개혁'이라 이를 수 있다. 물론 그안에도 다양한 경향들이 존재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 자본주의를 돌파하려는 서유럽의 사회민주주의적 개혁 노선이 이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예컨대 5, 6공 시절 '자유민주주의의 수호'가 절규되었다. 그러나 정권 스스로가 반자유민주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공허하고 위장된 외침에 불과하였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선포만 되었던 기존의 가치체계, 요컨대 자유민주주의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새롭게 구현하기 위해 애쓰는 경우, 우리는 그것을 '보수적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다. 현 노무현 정부의 개혁 의지가 바로 여기에 속한다. 이를테면 한국의 보수적 개혁은 지금까지 지배세력의 부도덕한 통치운리를 미화시키기 위해 악용되지만 했던 형식적 자유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긴급 수술 같은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명백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그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지니고 있는 약점과 모순을 그대로 껴안을 수밖에 없는 개혁인 것이다. 그러므로 보수적이다. 아울러 현 여권이 지향하는 개

혁의 목표는 선진 제국을 뒤쫓아 세계화 시대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질서에 부응하기 위한 내부 정비 노력에 초점을 맞추는 듯하다. 그러나 현 정권의 개혁이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나마 역사의 진보에 기여하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자유'와 '민주'가 존재하지도 않았던 허울 좋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 중인 개혁의 양상은 나라에 따라 다른 형태와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그러한 개혁은 보수적 개혁이다. 보수적 개혁이란 이미 최고의 가치로 선포되어진 것을 계속 긍정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거나 거나 또는 지금까지 유명무실했거나 등한히 해 왔던 가치를 새롭게 확립하고자 애쓰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질서와 자유주의 등이 그러한 가치의 핵심적 지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이러한 유형의 개혁이 지배적 현상으로 군림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위로부터의 개혁'이기 때문이다.

둘째, 개혁을 어떠한 세력이 주도하고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개혁의 양면성을 파헤칠 수 있다. 개혁이 보수적 개혁과 진보적 개혁의 이중성을 지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혁 세력은 근원적으로 보수진영과 진보진영 양쪽에서 동시에 공략당할 수 있는 이중적 위험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두 개의 이질적인 세력을 동시에 맞상대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혁은 대체로 적대세력 한쪽과만 씨름해도 좋은 수구나 혁명보다 오히려 더 많은 난관에 부딪칠 수도 있다. 이것이 개혁의 객관적 어려움이다.

또한 여기에 주체적 한계와 장애도 가세한다. 개혁이나 혁명 세력을 막론하고 새로운 사회질서를 수립하고자 노력하는 정치집단들은 흔히 심각한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 새로운 사회적 효과를 위해서는 우선 구질서를 대변하거나 그에 봉사하던 수구적 기득권 세력을 제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이 세력들이 거의 유일하게 전문적 행정 경험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관계 요로, 경찰, 군부, 경제계 등을 장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다. 심지어는 러시아 혁명 당시에도 레닌과 볼셰비키는 스스로 짜르 치하의 전문 행정요원들을 재등용할 정도였다.

그러나 자신의 권력 기반을 확고한 국민적 정통성 위에 뿌리내리고 있는 개혁 세력은 국민대중에 호소하고 또 이들의 힘으로 난관을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의 역사는 잘 보여 준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세력은 수구적 기득권 집단과 야합하여 자신의 부실한 지지 기반 및 정통성의 허약성을 보완하려 시도한다. 또 그를 통해 역사가 요망하는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포기한다. 예컨대 지난 김영삼 정권이 그 모범적 사례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오로지 수구적 지배체제로 일관해 온 곳에서 새롭게 권력을 장악하는 개혁 세력은, 예컨대 상당한 경륜과 전문지식을 요하는 행정 실무경험을 거의 갖추지 못한 경우가 태반이다. 그럴 기회와 여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이때 개혁이 일사불란하게 추진되기 힘들 것임은 손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보수적 정치 풍토로 인하여 순수한 개혁 의지가 생성되고 결집된다는 것도 그리 손쉬운 편은 아니라 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개혁은 바로 이러한 객관적 난관과 주관적 결함으로 인해 뒤뚱거리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지난 DJ 정권의 지붕 밑에는 보수적 수구세력과 민주적 개혁 지향세력이 완강히 동거한 적이 있었다. 말하자면 이른바 개혁을 지향한다는 정권 스스로가 태생적인 이중성을 버리지 못하고 개혁에 적대적인 집단을 모범적으로 감쌌다는 말이다. 이를테면 DJ 정권은 수구적 자민련과 결탁함으로써 자신이 표방하는 개혁 의지를 스스로 훼손시켜 버렸던 것이다. 사실 이것이 DJ 의 원죄였다.

이런 의미에서 혹시 현 정권의 우산 밑에도 이른바 민주적 개혁세력뿐만 아니라 보수적 수구세력까지 올망졸망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지는 않은지

준엄히 다그쳐 볼 일이다. 어디 그뿐인가. 개혁지향세력은 상당한 경륜을 요하는 행정 실무체험을 거의 갖고 있지 못한 형편이고, 반면에 풍부한 행정경험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인물들은 구시대적 가치관의 굴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과 깊히 관련되어 있는 현상이겠지만 개혁을 이끌고자 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그러한 것에 걸맞은 이중적 면모를 지니고 있는 정치인이었다. 김 대통령은 오랜 야당적 민주화 투쟁에서 비롯하는 지사志士적 품위도 갖추고 있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밀실정치적 흥정과 거래에도 상당히 능숙한 공작적 풍모를 지니고 있음도 부인하기 힘들다. YS가 3당 야합을 저질렀다면 DJ는 DJ·JP 2당 교합을 결행한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까지의 이러한 우울한 역사적 배경을 등에 지고 출범한 노정권의 정치적 미성숙으로 인해, 자칫하면 다가오고 있는 통일의 시대에 '이중성의 시대'가 풍미할지 모른다. 이를테면 '갈팡질팡', '냉탕온탕', '그럭저럭', '오락가락', '두리몽실' 정치가 우리 사회를 지배할지도 모른다는 말이다. 온 사회에 '막가짜' 식 '막가이즘'이 횡행할 수도 있는 것이다. 두려운 일이다.

개혁의 추진 전략: '급진적 개혁'

혁명은 무엇보다도 폭력적·불법적으로 수행되는 법질서 및 정치 제도의 급격한 변화양상을 일컫는다. 요컨대 혁명이란 대중운동에 의해 수행되어 지고, 폭력적으로 관철되며, 이데올로기적으로 진보, 해방, 자유, 평등 등의 이상을 지향하고, 침예하고 광범위한 위기의 연속선상에서 정치조직, 사회 및 경제구조, 소유관계 원칙들에서의 급격하고 과격한 변화가 전개되는 상황을 뜻한다. 그러므로 혁명주체세력은 목숨을 걸고 기존 지배질서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기존 세력이 타도되든지 혁명세력이 박멸되든지 하는 생사를 건 양자택일의 가능성만 존재할 수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목숨을 걸

고 새로운 지배질서를 형성한 혁명세력의 시책과 노선을 어느 누구도 감히 거부하지 못한다. 반대는 곧 종말을 의미할 뿐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어떠한 급진적 혁명세력도 권력을 장악한 직후에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즉시 보수화할 수밖에 없게 된다.

1. 개혁과 혁명 그리고 수구

반면에 개혁은 차원과 본질을 전혀 달리 한다.

개혁은 주어진 법과 제도 아래에서 그리고 개혁세력의 의도와 목표가 만천하에 공개된 상태에서 추진된다. 법과 제도라는 민주적 절차와 범주의 한계 안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살기등등하지는 않다. 이를테면 개혁세력은 목숨을 걸고 개혁에 나서지는 않는 것이다. 평화적이다. 그러므로 지원세력의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결집과 결속이 필수적이다. 대중을 이해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까지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여론의 형성과 향배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의 든든한 후원이 감지될 때 개혁이 전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부분적으로나마 성과를 보임으로써 여론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어야 한다. 요컨대 개혁은 여론 확보 투쟁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개혁을 수행하는 일은 위험부담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또한 평화적인 여론의 형성 및 지원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개혁은 장기간을 요하는 과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시간을 질질 끌게 되면 서로가 의도했던 개혁의 지향점에 차이가 있음을 더욱 명확히 알게 됨으로써 개혁세력 간에는 반목이 싹들 수 있다. 따라서 개혁은 급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마디로 장기성 전술설정과 단기성 전략강행, 요컨대 원대한 개혁철학의 제시와 급격한 개혁정책의 수행, 이것이 바로 개혁의 본질적 특성이면서 동시에 모순이기도 한 것이다.

반면에 수구세력들은 시간을 확보하기만 하면 개혁을 저지시킬 수도 있

는 강력한 전래의 '군사력'을 소유하고 있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려운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요컨대 개혁의 대상이 되는 집단의 의지와 자세가 매우 강경하다는 말이다.

인간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이득과 공포다. 이런 의미에서 수구세력들은 전통적인 이득의 상실과 개혁세력의 압력에 대한 공포로 불안에 떨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그들로 하여금 과격한 자기 수호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자신의 이해관계를 수호하기 위해 그들은 무섭게 저항한다. 그러므로 개혁추진세력에게서 살기가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혁의 청산 대상에게서 살기가 느껴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수구세력들은 쉽사리 뚫릴 뚫힌다. 뿐만 아니라 수구세력은 기득권이라는 탁월한 군비까지 갖추고 있다. 반면에 개혁은 민주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부담까지 안고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많은 경우에 개혁세력들은 수구세력들의 완강한 저항에 좌초하기 일쑤다. 뿐만 아니라 개혁세력 자체의 불화나 허약한 결속력이 그에 가세하는 경우가 또한 잦다. 역사적으로 보면 반개혁세력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했다는 것이 개혁의 가장 큰 실패 사유로 꼽히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개혁세력을 강력히 결속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통일된 개혁철학의 정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아울러 시민단체 및 노동계를 포함하여 여·야를 망라한 책임 있는 개혁세력들을 거족적으로 결집시킬, 범국민적인 방도를 모색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다. 혁명만 급진적인 것이 아니다. 개혁도 충분히 급진적으로 과격하게 수행할 수 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기다.

역사의 발전은 개혁 쪽에 있다. 진보는 진보眞寶다. 요컨대 '진짜 보석'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급진적 수구를 상징·대변하는 정치인 및 그 주변집단과의 단호한 결별을 서두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온건 기득권 세력을 개혁·세력화하는 작업을 줄기차게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 동시에

서로 다른 진영에 속해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합리적 개혁 지향성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이 있다면, 이들을 과감히 결집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혁추진세력의 저변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미 YS 때조차도, 개혁이 고조되었을 때 국민 대다수가 정부의 편에 서 있었다. 그리고 YS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는 듯했다. 더구나 우리는 탄핵 정국의 촛불과 열린우리당의 제1당으로의 부상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약진을 체험하지 않았는가. 개혁을 향한 우리 국민의 열망을 이보다 더 극명히 보여 준 실증 사례를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2. 정치권의 체질 및 체제 개혁

이번 4·15 총선 결과는 우리의 정치권이 그 체질과 체제를 동시에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다는 준엄한 국민적 결의의 표시다. 세대교체와 정계개편은 그를 위한 아마도 가장 바람직한 방안의 하나가 될 것이다. 우리 정치문화의 가장 고질적인 질환은 권위주의와 지역주의와 온정주의라 할 수 있다. 능력 대신에 관록이, 이념 대신에 지방색이, 합리성 대신에 연줄이 우리의 정치세계를 주름잡고 있다는 말이다. 사사로운 집권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런 구태의연한 정치 행태를 근본적으로 청산하기 위해서 세대교체와 정계개편 등의 외과수술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정계개편은 정치세계의 대대적인 지각변동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그 의의와 파장은 실로 엄청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여당, 야당, 시민단체 및 노동운동권 등 재야세력을 통틀어 개혁적 지향성을 지니고 있는 정치집단들이 총단합하는 국면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개별 집단들의 인맥이라든가 성장배경 등의 차이로 인해 그리 손쉽게 이루어지기는 힘들겠지만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 안목에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아닌가 여겨진다. 예컨대 거국내각 구성은 그 과정상의 한 가지 중요한 방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개혁지향적 양심세력은 힘이 없고, 힘이 있는 세력은 양심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당면 현실이니 어찌 하겠는가. 그러나 특히 국민복지 증진을 위해 전력을 경주할 때, 개혁세력에 대한 범국민적 지원이 뒤따를 것임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는 개혁의 토대 확산뿐만 아니라, 개혁세력의 대동단결을 위한 확고한 기초작업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지금은 국제적 개혁의 시대다. 따라서 수구세력은 머지않아 절망적 위기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오늘날 이른바 ‘좌파’의 자세를 아우르며 공격하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영어 ‘래디컬radical’의 어원은 ‘뿌리채 파고든다’는 의미를 가진 ‘라디스’라는 라틴어다. 말하자면 뿌리까지 파고들어 속속들이 따지고 드는 단호한 태도를 일컫는 말이다. 우리에게도 옛적부터 이러한 ‘급진적인’ 정신이 전통처럼 살아 숨쉰다. 예컨대 발본색원(拔本塞源)하는 정신이야말로 우리들의 고고한 자랑거리가 아니었던가.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급진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혁명의 불가능성을 일단 전제한다면, 보수적 개혁에 맞설 유일한 효율적 방략은 진보적 개혁밖에 없다. 진보적 개혁이란 지배집단이 수호하고자 하는 기존의 가치체계를 그 가치체계가 허용하는 가장 과격한 수단에 호소함으로써 대중적·평화적으로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하지만 빠른 변화가 내습하는 시기에 마냥 멈칫거리기만 한다는 것은 낙오를 의미한다. 어쩌면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사자의 용기보다 뱀의 간지가 더욱 필요한 시대인지도 모른다.

개혁의 철학: ‘전통주의적’ 진보주의

특히 우리 지식인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보다는 지혜라 할 수 있다. 두뇌로 하는 게 지식이라 한다면 인품으로 쌓아 가는 것은 지혜라 이를 수 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구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에 대한 지식, 그게

바로 지혜”라고 설교하였다. 이를테면 지식이란 자신이 그만큼 배웠다는 자만이고, 지혜란 자신이 더 이상 알지 못한다는 겸손을 일컫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예컨대 어리석은 자는 친구로부터 많은 것을 얻지만 지혜로운 자는 원수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법이다. 하여 돈이 많아도 불행할 수 있는 것처럼, 지식과 학문이 넘쳐도 지혜를 얻지 못할 수 있음은 자명한 이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적 지혜가 오랜 세월이 걸쳐 고이고이 지층처럼 퇴적한 것을 우리는 ‘전통’이라 이른다. 특히 그 속에는 온갖 인간적 고통과 환난에 맞서 싸워 그걸 물리쳐 온 값진 흔적들이 승전고처럼 남아 있다. 인간과 인간의 싸움질, 자연과의 몸쓸 부대낌이나 어우러짐 그리고 그 속에서 싹텄던 사랑과 증오의 지취들이 흥건히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 지혜를 채광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전통이란 지혜의 광산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역사는 기억의 복원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기억의 능력을 최대화하려는 노력이 역사라는 말이다.

나는 이러한 전통, 이른바 ‘낡은 것’을 좋아한다. 그러다 보니 뭔가 썩어가는 냄새 역시 꼭 애호하게 되었다. 셰익스피어도 어디에선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점점 성숙해간다. 그러면 우리는 점점 썩어 가는 것이리라(in the course of the time we ripe and ripe. And then, we rot and rot)”라고 읊은 적이 있다. 성장하고 익어 간다는 것이 썩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니 어찌 낡고 썩어 가는 것들이 싫어질 수 있겠는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는 손때와 땀 냄새를 사랑한다. 하여 때묻은 골동품 같은 것에 가난하고 정다운 애착을 가진다. 그게 어떠한 것일지라도 과거의 유산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해서 그걸 함부로 업신여긴다는 것은 하찮은 인간의 얼마나 경박한 태도이겠는가. 어제 경탄받은 것을 오늘 우습게 여겨버린다면, 그건 또 얼마나 경망스러운 몸놀림일까.

예컨대 북이나 장구 등 타악기에는 우리 선조의 갖가지 삶의 애환이 흥터

처럼 남아 있다. 원래 그것들은 악기 가운데에서 가장 역사가 오랜 것들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러하니 이 타악기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면 어딘지 모르게 태고의 향내가 연초처럼 짙게 풍겨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속에 호랑이 담배 냄새들 왜 없겠는가.

물론 고귀한 예술적 기품이 뛰어난 옛 선인들의 발자취를 어찌 멀리할 수 있겠는가만, 나에게도 오히려 '밀바닥 인생들'이 쓰던 것들이 더욱 정겹게 다가온다. 서민들의 땀과 손때 그리고 한숨과 환희로 얼룩진, 실생활에 쓰였던 일그러진 물건들에 더욱 따뜻한 정이 쓸림을 어쩔 수 없다. 가령 장롱이나 반짚고리, 쌀바가지, 밥그릇, 지게, 탁자, 밥주걱, 짚신, 호미 등등에 배어 있는 '아랫것'들의 회한과 우여곡절과 몸부림과 회로애락이 훨씬 더 진하게 내 가슴을 두드린다. 그런 것들에는 거드름 피우는 헛기침 같은 게 없다. 그러니 더욱 값질 수밖에.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따금 지난날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특이한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곤 하는 눈치다. 특히 IMF를 체험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사회적으로 널리 번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난관에 봉착해 있는 일상적인 삶이 미래를 기약해 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장밋빛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정치세력이라도 존재한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 허나 현재와 미래가 모두 찢기 없는 잣빛으로 물들어 버린 이처럼 암담한 상황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했던 지난 과거에 눈길을 돌리는 것이 그래도 유일하게 허용된 사회적 자위 행위일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일까. 과거와 '옛것'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풍조가 확산된다. 예컨대 '옛날식 자장면', '옛날식 포장마차', '고향의 맛' 등의 광고문안이나 '덕이 나 은실이'처럼 과거사를 다룬 TV 드라마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현실이지 않은가. 뿐만 아니라 지금 복고풍의 대중가요가 한창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고도 전한다. 이를테면 '익숙했던 것과의 재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적이 안심하고 몸을 갖다 기댈 수 있도록 해 주는, 한때 친숙했던 전통에 대한 신뢰감이 새로이 샘솟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옛것을 고집하는 사람들을 일러 수구주의자니, 국수주의자니, 보수주의자니 하는 멸칭으로 한꺼번에 싸잡아 으박질러버리는 잘못을 태연히 범하기도 한다. 물론 지난 과거를 확일적으로 미화하고 숭상하는 태도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에까지 맥맥히 살아 움직이는 지난날의 지혜로운 삶의 흔적들까지 송두리째 내팽개쳐 버린다면 그 또한 현명한 처사는 결코 아니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 하지 않았던가. 과거의 샘에서 신선한 교훈을 되 끌어올려, 오늘과 내일의 지양분으로 삼아 나가는 일은 얼마나 지혜로운 삶의 태도인가.

헤겔이 말하는 변증법적 '지양Aufheben'의 진정한 의미도 바로 이러한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제거하다', '없애다' 정도의 가벼운 의미를 지닌 말이 아니라 '위로 끌어올리며 극복해 나간다'고 하는 보다 심오한 역사적 뜻을 함축한 철학적 개념인 것이다. 요컨대 '지양'이라 함은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부정적인 요소는 제거해야 마땅하지만 그것이 지니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은 심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역사적 요청을 담고 있는 개념이라는 말이다. 예컨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계급착취, 부자유, 불평등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는 척결해 나가되, 인권 및 개인 자유의 신장이라든가 제반 시민적 민주주의 원칙의 확립 등 긍정적인 측면은 계속 개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뜻인 것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도 유물 변증철학을 건설함으로써 바로 이러한 원칙에 충실하고자 애썼다.

물론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주로 '누가' 지배하는가에 관해서만 관심을 집중시키고 '어떻게' 지배하는가에 관해서는 대체로 무관심한 태도를 견지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인권, 법

치주의, 보통선거, 의회제도, 권력분립 등 자본주의 사회의 긍정적인 성과물들을 사회주의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어떻게 재구성하거나 개혁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도외시해 버린 것이다. 이들은 부르주아 사회에서의 ‘정치’의 개념을 부정적인 것으로 단정지어 버렸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모든 형태의 정부 및 국가를 부정적인 것으로 차치해 버렸다. 그리하여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지니고 있는 모순을 은폐, 완화, 교정시킬 수도 있는 역량과 가능성을 소유한 체제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요컨대 국가권력의 계급적 본질과 그 극복 가능성에만 집착함으로써 그것이 행사되는 방식의 탐구에는 소홀해 버린 것이다. 그리하여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과소평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자신들의 변혁을 위해 이용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뿌리친 셈이었다. 이를테면 변증법적 ‘지양’을 역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지는 못했다는 말이다.

어쨌든 뿌리 깊은 전통 속에는 그 자체를 스스로 거부하고 극복케 함으로써 결국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도록 만드는 역사의 동력이 숨어 있는 법이다. 요컨대 전통이란 스스로를 키워 나가려 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부인하는 끝없는 진통의 연속이다. 전통은 곧 진통이다. 그리하여 전통은 이러한 진통을 겪으며, 미래에 만개하게 될 꽃망울을 자신의 내면에 품고 있다. 거목巨木도 처음에는 새싹이었다. 이를테면 전통이란 뿌리이자 새싹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전통주의적 진보주의를 지향해야 한다. 전통 속에 내재해 있는 병든 뿌리를 잘라 내면서, 동시에 새싹을 울곧게 키워 거목으로 성장토록 이끌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전통주의적 진보주의인 것이다. ■

박호성 ongdal@mail.sagang.ac.kr | 본지 편집위원장,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저서로는 『평등론』, 『노동운동과 민족운동』, 『남북한 민족주의 비교연구』의 다수가 있다.